

정책 동향 4호 (11/20~11/26) 2017년 11월 27일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기관명	분야	제목	쪽
대학내일 20대연구소	청년	주간 20대·대학생 뉴스(11월4주)	2
국회입법조사처	정책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및 개선방향	2
통일연구원	외교	문재인 정부의 新 남방정책과 對 아세안 북핵 외교	3
여의도연구소	통상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추진의 정책적 시사점	4
KDI	경제	IMF 외환위기 발생 20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5
한국국방연구원	안보	레이저 대공무기 발전 추세와 획득전략	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성평등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7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기관명	분야	제목	쪽
주한미국대사관	외교안보	미국,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8
외교부	외교안보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	9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	10
통계청	고용	2016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10
※ 참조자료	정치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12

※ '싱크탱크 미래'의 공식입장이 아닌 회원님을 위한 정보제공 자료이므로 인용·보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 주간 20대·대학생 뉴스(11월4주) (대학내일 20대연구소, 2017.11.27.)

<요약>

- 1) 20대: ‘급식체’ 열풍? “어, 인정”...“급식체는 동의를 구하거나 놀람을 표현하기 위해 의미와 상관없는 다양한 말들을 리듬감을 살려 무한 반복하는 특징을 지닌다. ‘당근’ ‘혈’ ‘간지’처럼 하나의 단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인터넷 은어의 총합이라 정형화된 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부분, 각, ㅇㅈ(인정)’처럼 예전부터 유행하던 말을 넣어도 되고 ‘버벌진트, 샘오취리, 쿵쿵따’ 등 생각나는 말을 재미있게 엮어도 상관없다.
- 2) 취업: 취준생들에게 잘 팔리는 '합격 정장' / “대기업 아니면 스타트업에 갈래요”
- 3) 대학생: 대학생 10명 중 3명 “결혼 생각 없다”...출산·양육 최우선 조건은 ‘소득’

<원문 읽기> <https://goo.gl/zoQmb1>

[시사점]

- 1)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제공하는 20대·대학생 뉴스 클리핑을 통해서 미래세대의 최신 트렌드와 고민 참조.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및 개선방향 (김민창, 국회입법조사처, 2017.11.23.)

<요약>

1) WEF(World Economic Forum)와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4년 이후 4년 연속 26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IMD의 평가결과에서는 2013년 22위에서 2017년 29위로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2) WEF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12개 부분별로 불균형(거시경제환경 2위, 인프라 8위, 제도적 요인 58위, 금융시장 성숙도 74위 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노사간 갈등과 높은 정리해고 비용 등으로 만성적으로 노동시장 효율성이 매우 낮음을 지적하였다.

<표 2> WEF의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구분	'15	'16	'17
전체 순위	26	26	26
○ 기본요인	18	19	16
- 제도적 요인	69	63	58
- 인프라	13	10	8
- 거시경제 환경	5	3	2
- 보건 및 초등교육	23	29	28
○ 효율성 증진	25	26	26
-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23	25	25
- 상품시장 효율성	26	24	24
- 노동시장 효율성	83	77	73
- 금융시장 성숙도	87	80	74
- 기술수용	27	28	29
- 시장규모	13	13	13
○ 기업 혁신성숙도	22	22	23
- 기업활동 성숙도	26	23	26
- 기업형사	19	20	18

<표 3> IMD의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구분	'15	'16	'17
전체 순위	25	29	29
○ 경제성과	15	21	22
- 국내경제	12	18	17
- 국제무역	29	29	35
- 국제투자	32	35	40
- 고용	6	6	7
- 물가	52	50	47
○ 정부효율성	28	26	28
- 공공재정	25	20	19
- 조세정책	19	18	15
- 제도여건	25	25	29
- 기업규제	45	46	48
- 사회여건	40	40	42
○ 기업효율성	37	48	44
- 생산성&효율성	38	38	35
- 노동시장	35	51	52
- 금융	31	37	35
- 경영관행	53	61	59
- 행태가치	29	38	36
○ 인프라	21	22	24
- 기본인프라	23	24	27
- 기술인프라	13	15	17
- 과학인프라	6	8	8
- 보건·환경	30	35	35
- 교육	32	33	37

3) IMD의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는...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분야(22위)에서...물가 부분의 7개 세부 항목 중 생계비 항목의 경쟁력이 54위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 분야(28위)에서...특히 기업규제 부분에서는 20개 세부항목 중 창업(56위), 이민관련 규제(57위), 사업용이성(57위) 항목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여건 부분에서는 14개 세부항목 중 인구고령화(60위), 사회적 응집력(57위) 등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효율성(Business efficiency) 분야의 경쟁력은 44위 수준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노동시장 부분(52위)과 경영관행 부분(59위)의 경쟁력이 최하위권...노동시장 부분 24개 세부항목 중 노사관계(62위),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59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48위) 항목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관행 부분의 경우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60위), 관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60위), 기업가정신(62위), 감사.회계의 적절성(63위), 이사회 회사경영 감독의 효과성(63위) 항목의 경쟁력이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두 기관의 평가결과에서 모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동시장과 기업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필요...국가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들이 관련 규제 및 법 규정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회계투명성 등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노사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또한 높은 정리해고 비용 및 노동관행의 개선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필요...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과 기업경영 부분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 수립과정과 정책 목적 등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원문 읽기> <https://goo.gl/2Z5L2X>

[시사점]

1) WEF와 IMD 두 기관의 평가결과에서 모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동시장, 기업부분, 정부의 경제시스템 개혁과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에 주력해야 할것임

■ 문재인 정부의 新 남방정책과 對 아세안 북핵 외교 (성기영, 통일연구원, 2017.11.24.)

<요약>

1)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라는 무대에서 다자, 또는 양자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한둘이 아니다...ARF는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 grave concern)’를 표하고 북한을 향해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북한에 대한 ‘비난(condemn)’은 자제한 대신 과거 의장성명에 등장했던 ‘우려’의 표현을 ‘심각한 우려’ 정도로 격상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의장성명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회원국들이 주장한 내용을 반영한 ‘쌍중단(double freeze)’ 및 ‘쌍궤 병행(simultaneous progress)’ 등이 동시에 언급되기도 했다.

2) 아세안은 회원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이른바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구축해 발전시켜왔다...경쟁과 협상보다는 협의와 설득, 그리고 타협이라는 방법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아세안 국가들은 회원국 상호간 내정불간섭 원칙을 강조한다...아세안 국가들이 ‘조정외교(diplomacy of accommodation)’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세안이 내세우고 있는 이러한 규범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회원국 간 미묘한 이견이 노출될 때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북한은 2000년 ARF 가입 이후 꾸준히 연례 안보전망 보고서(Annual Security Outlook : ASO)를 아세안에 제출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북-아세안 우호협력 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 TAC)에 공동서명하기도 했다. 최근 북핵 도발 국면에서도 북한의 대(對) 아세안 외교는 집요했다. 지난 4월, 외무성이 이례적으로 아세안에 서한을 보내 한미합동 군사연습 반대를 촉구했는가 하면 5월, ‘화성-12’ 발사 직후에는 평양 주재 아세안 국가 대사들을 별도로 모아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4)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중국의 대북 특사 외교의 한계 노정으로 인해 주변 4강 차원의 북핵 문제 해법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우회로로서 아세안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더 이상 한반도 주변에 국한돼 있는 안보 위협이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평화-안정-발전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위협요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원문 읽기> <https://goo.gl/fB4oj8>

시사점

- 1) 아세안 회원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아세안 방식(ASEAN way)’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종의 우회로로서 아세안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안 참조.
- 2) 아세안을 일회성 도구가 아닌 지속가능한 파트너로서 다양한 전략대화 프로그램 가동을 제안한 부분도 참조할만함.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추진의 정책적 시사점 (이종인, 여의도연구소, 2017.11.20.)

<요약>

- 1) 트럼프대통령의 서명철회(1.23) 및 탈퇴선언으로 좌초 직전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CPTPP’로 개명하여 새로이 출범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2) 미국을 제외한 TPP 11개국이 우선 참여한 ‘TPP11’형태로 추진.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경제대국 미국이 제외되었지만 세계 GDP의 12.9%, 세계 교역량의 14.9%, 세계 인구의 6.9%를 차지하는 글로벌 거대 경제권 탄생 예고...일본은 장기적으로 TPP를 통해 아·태지역내 자국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해 왔으며, 향후 CPTPP를 주도함으로써 그 수준을 더욱 강화해 갈 것으로 보임
- 3) 미국의 TPP탈퇴선언 이후 RCEP를 통해 (미국 대신) 아·태지역내 자유무역의 중심에 서겠

다는 중국의 야심이 구체화. RCEP에는 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협상에 참여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2012.11.20. 16개국 정상들이 협상을 개시하여 2015년말 타결을 목표로 했으나 참여국들간의 이견으로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는 상태. 당초 아시아지역 경제권에서의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이 제안하였으나 현재는 중국이 협정의 추진을 주도하는 형국임.

4) CPTPP의 진척으로 RCEP 협상추진이 다소 지장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제1교역국 중국과의 경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아·태지역 내 강국들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탈퇴해 있는 현 시점이 우리나라가 CPTPP에 참여할 호기

<원문 읽기> <https://goo.gl/S9Y5MW>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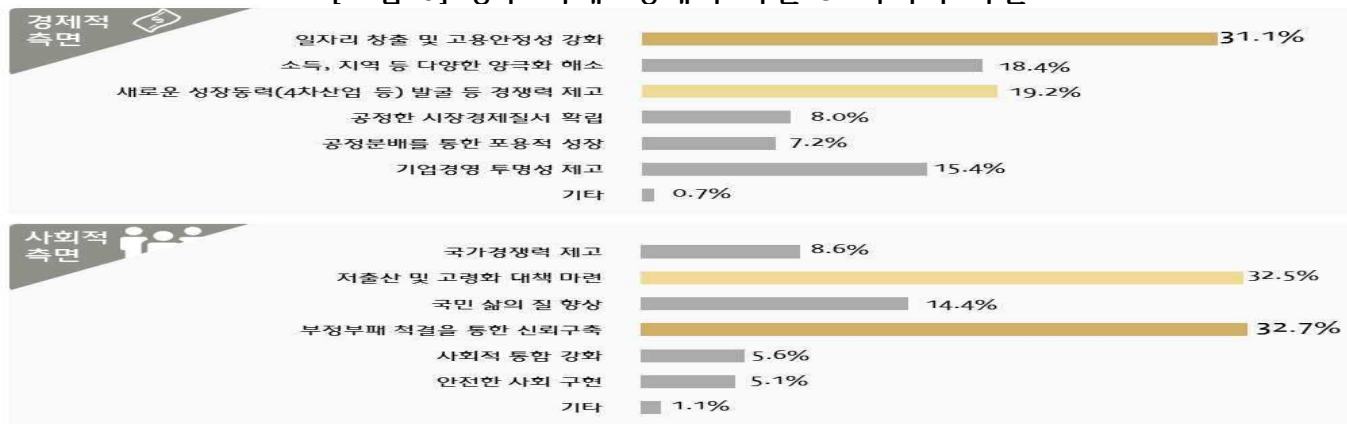
1)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의 무역압력과 FTA 재협상 등의 수비적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메가FTA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무역규범 제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조언과 함께 참조.

IMF 외환위기 발생 20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임원혁-정영호, KDI, 2017.11.14.)

<요약>

- 1) KDI는 IMF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아 외환위기가 국민들의 인식과 삶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2) 그 결과, 일반국민 57.4%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 ‘IMF 외환위기’를 지목했고, 일반국민의 59.7%가 IMF 외환위기가 본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 3) 외환위기의 원인은 ‘외환보유고 관리, 부실은행 감독 실패 등 정책적 요인(36.6%)’, ‘정경유착의 경제구조 등 시스템적 요인(32.8%)’으로 평가했으며, 조기 극복의 원동력은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 단합(54.4%)’, ‘구조조정 및 개혁 노력(15.2%)’에 있다고 평가함.
- 4)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이한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 강화(31.1%)’,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 구축(32.7%)’,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32.5%)’이라고 응답함.

[그림 9] 향후 과제: 경제적 측면 & 사회적 측면



<원문 읽기> <https://goo.gl/cXPDw2>

[시사점]

1) 외환위기의 원인은 정부실패로부터 야기되었다는 평가임. 즉, ‘외환보유고 관리, 부실은행 감독 실패 등 정책적 요인(36.6%)’, ‘정경유착의 경제구조 등 시스템적 요인(32.8%)’으로 평가
2) 현재의 국가적 과제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 강화(31.1%)’,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 구축(32.7%)’,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32.5%)’을 꼽은만큼, 이런 과제를 풀지 못할 경우, 새정부 초기의 호의적 평가는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 또한 상존함. 또한 야당들도 이런 과제에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것임.

■ 레이저 대공무기 발전 추세와 획득전략 (김종국, 변유진, 한국국방연구원, 2017.11.13.)

<요약>

1) 레이저는 “복사의 유도방출에 의한 광 증폭(LASER: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이라는 어원에서 발생된 용어...레이저 대공무기는 고에너지 레이저 빔을 표적에 조준하여 집중.발사하여 표적을 직접 파괴하거나 (Hard-Kill), 또는 표적영상장비 등의 핵심부품기능을 무력화(Soft-Kill)시키는 무기체계이다.

2) 공격무기로 사용하는 레이저 무기는 10kW부터 메가와트(MW)사이의 출력을 사용한다. 중.소형 무인기가 표적일 때는 대략 10kW~100kW 사이의 출력이 요구되고, 해상의 작은 함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수십 kW부터 수백 kW의 출력이 필요하다. RAM, 대공미사일, 공대지 순항미사일 등과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백kW의 출력이 요구된다. 특히 원거리의 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 음속 공대지 미사일,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백 kW~MW급의 출력이 필요하다.

3) 국내의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위한 기본 기술 수준은 기술성숙도 평가를 통하여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에 진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광섬유 레이저 발생장치는 아직 기술 수준이 미흡하므로 광섬유 레이저 발전장치를 상용품으로 획득하고 추적조준장치 및 사격통제장치를 국내개발 한다면 국내기술로 초보적 단계의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바 있다.

4) 고에너지 레이저 대공무기 획득전략은...레이저 광섬유 발전기술을 포함한 중장기 핵심기술을 병행하여 개발하고...장기적으로는 고효율 광섬유 레이저와 같은 핵심기술 개발을 병행하여 레이저 무기의 획기적인 소형.경량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기존 국지방공체계를 보완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함정을 방호하는 해상방호체계 그리고 더 나아가 항공기에 탑재하여 자체보호 및 공격을 수행하는 역할도 모색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문 읽기> <https://goo.gl/Gtmpsv>

[시사점]

1)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레이저무기의 세계적인 개발 현황과 우리의 과제를 정리할 보고서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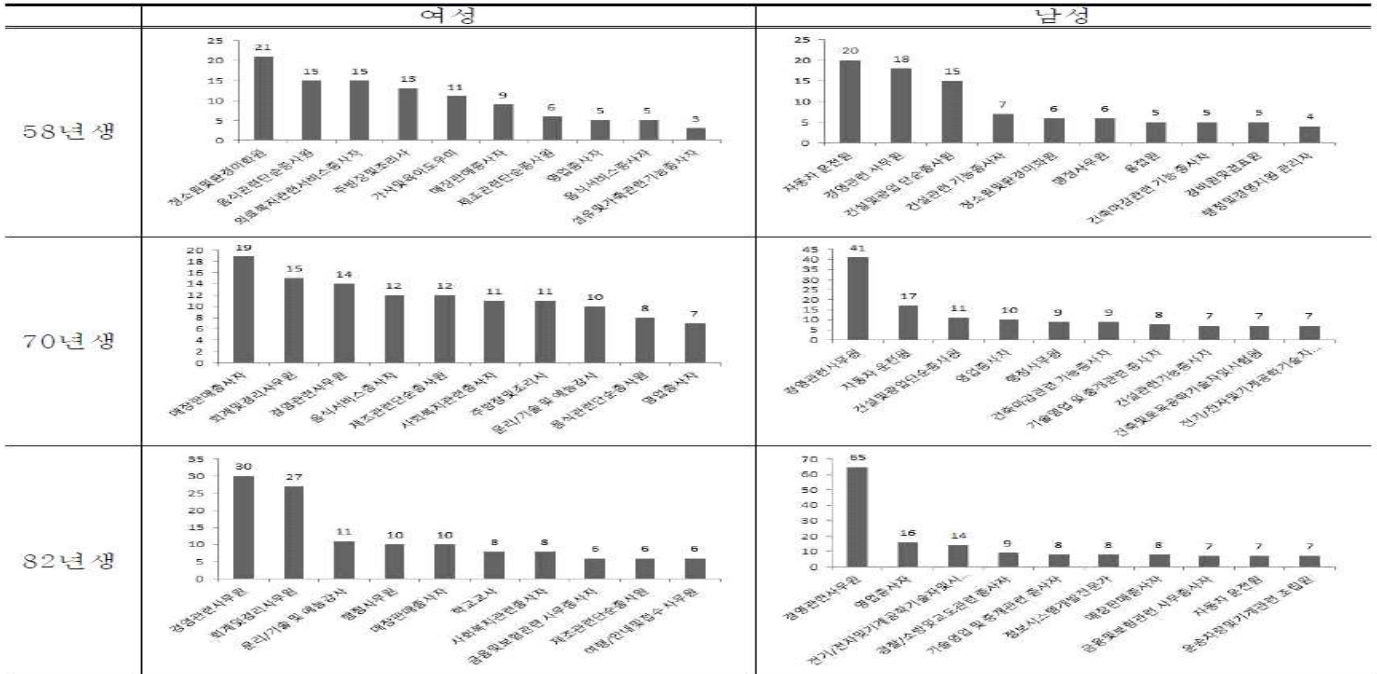
■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11.23.)

<요약>

1) 2017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판매된 소설이 '82년생 김지영'이다....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 차별이 거의 사라진 세대를 대표하는 82년생 여성들의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82년생 여성은

[그림 17] 임금노동자 10대 직업

(단위 : 천명)



자료: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

남성보다 2만6천명 적게 태어났으나 경제활동인구는 남성보다 16만5천명 적다.

2) 82년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8%, 고용률은 57.9%로 58년생 여성을 제외하고 동년배 남성, 70년생 여성과 남성, 58년생 남성에 비해 가장 낮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82년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1.0%, 고용률이 49.7%로 나타나 육아로부터 벗어난 나이로 추정되는 70년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69.1%, 고용률 67.9%보다 낮다.

3) 82년생 정규직 10명 중에서 여성이 3명이고, 남성은 7명이다. 비정규직은 여성과 남성이 거의 절반씩 차지...82년생 여성 중에서 정규직 비율이 67.4%(14만명)이지만 70년생 여성은 50.2%(11만1천명), 58년생 여성은 30.9%(4만3천명)이다. 반면, 82년생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79.8%(27만명), 70년생 남성의 경우 74.2%(22만3천명), 58년생 남성 60.0%(11만1천명)이다. 한편, 학력별로 볼 때, 세 연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85.7%인 82년생 중졸이하 여성으로 사실상 10명 중 9명이다. '고학력자 시대'에 저학력자일수록 사회적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82년생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19만원, 같은 나이 남성의 임금은 286만원으로, 남성 임금을 100만원이라 할 때, 여성 임금은 76만6천원이다. 82년생 여성의 임금은 70년생 여성의 임금(188만원)보다 31만원 높고, 58년생 여성(144만원)보다 75만원 높다. 여성의 임금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남성의 임금은 70년생이 가장 높고 82년생이 가장 낮다. 동일한 고용형태라 하더라도 성별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

5) 82년생 여성이 선택한 10대 직업 중에서 비정규직이 다수인 직업 1위는 문리/기술 예능

강사(91.2%, 1만명), 2위는 매장판매종사자(60.7%, 6천명)이다. 58년생보다 70년생이, 70년생보다 82년생 여성의 10대 직업에 이전 세대보다 고임금 직업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동일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남성의 임금이 더 높는데, 경영관련사무원의 경우 여성(259만원)이 남성(309만원)보다 50만원 적다. 금융 및 보험관련 사무종사자의 경우에도 여성(318만원)이 남성(364만원)보다 46만원 낮다.

6) 82년생 여성의 미래는 무엇인가. 12년 뒤 육아로부터 벗어나 노동의 세계로 귀환하면, 82년생 여성의 미래는 2016년을 살아낸 70년생 여성처럼 매장판매직이 직업 1위가 될 것인가. 24년 뒤는 오늘 날 청소원이 직업 1위인 58년생 여성의 기시감이 들 것인가. 82년생 여성은 띠동갑인 70년생이나 58년생에 비해 4년제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다수이나 여전히 10명 중 4명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일하는 여성도 남성보다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다. 이는 12년 전 70년생 여성과 24년 전 58년생 여성의 삶과 대동소이할지도 모른다.

<원문 읽기> <https://goo.gl/sVLrtB>

시사점

- 1) “교육차별이 거의 사라진 세대를 대표하는 82년생 여성들의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한 자료이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노동의 세계에서 취약계층화 가능성을 분석한 자료.
-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으로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미국,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트럼프 대통령, 2017.11.20.)

<요약>

- 1) 미국은 오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이미 오래 전에 실행했어야 할 조치입니다. 아주 한참 전에 실행했어야 할 조치입니다.(Today, the United States is designating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t should have happened a long time ago. It should have happened years ago.)
- 2) 이번 지정으로 북한과 관련자들에게 추가적인 제재와 벌칙이 부과될 것이며 이번 지정은 여러분이 익히 들어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던 살인 정권을 고립시키는 극대화된 압박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This designation will impose further sanctions and penalties on North Korea and related persons, and supports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to isolate the murderous regime that you've all been reading about and, in some cases, writing about.)
- 3) 테러지원국...명단에 포함된 국가는...△무기 판매 및 수출 금지 △엄격한 수출 통제 △경제 원조 금지 △기타 금융 제약 이미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

다...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는 이란, 수단, 시리아가 포함된다. 북한은 2008년에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4)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암살 등 국제 테러 범죄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앞으로 2주 동안 미국 재무부에서 추가적인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 북한은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하며 국제 테러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읽기> <https://goo.gl/gd3b9o>

[시사점]

- 1) 트럼프 대통령은 “살인정권(murderous regime)”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북한에 대한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위한 행보로 테러지원국을 재지정함.
- 2)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를 포함한 최대의 제재가 이미 실행 중이지만,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상징적인 조치일 뿐만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는 기제로도 활용가능한 옵션임.

■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 (외교부, 2017.11.23.)

<요약>

- 1) 강경화 장관은 11.22(수) 오후 베이징에서「왕이(Wang Yi, 王毅)」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양측은 금년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특히, 강 장관은 양국 지도자들이 공감한 대로 양국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정상화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문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되고 양국간 인적 교류가 예전처럼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함.
- 2) 왕 부장은 10.31 발표 및 최근 중국 정상이 표명한 입장을 언급하는 한편, 양국간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자고 함.
- 3)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얼마 전 양국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일부 합의를 달성했다’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임시 배치되는 사드가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중국은 이를 중시한다’ ‘중국의 옛말에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강경화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지난달 31일 양국 관계 개선 관련 발표라는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문 대통령 방중에 앞서 우리 기업 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해소되고 인적교류가 예전처럼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원문 읽기> <https://goo.gl/EWxXem>

[시사점]

- 1) 한중 간에 이면 합의가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능한 왕이부장의 발언에 주목함. 즉,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일부 합의를 달성했다...한국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주길 바란다” 부분과 관련하여 정부의 투명한 설명책임이 있음.

2) 특히 문화일보 11/23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우리 정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해 이에 대한 기술적 설명, 성주 기지 현지조사,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등 세 가지 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필요성

■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017.11.22.)

<요약>

- 1) 11/22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에 향후 있을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응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관련 업계·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
- 2)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으며,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 발생했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평가...특히 축산농가 및 과일농가 등은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하락 따른 소득감소 및 농가수 감소, 자급률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 3)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업분야 피해가 상당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아울러, 현재 피해가 큰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계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농축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4) 11/23 강성천 통상차관보는...정부는 제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익 최우선과 이익균형의 원칙하에 향후 한미 FTA 개정 논의에 대응해나갈 것임을 강조. 간담회...참석자들은...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일자리 우선정책 등을 감안할 때 미측이 향후 한미 FTA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 이에 대해, 정부와 제조업계가 상시적 논의 및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철저히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

<원문 읽기> <https://goo.gl/V4Eme6>

■ 시사점

- 1)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농축산업계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성과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의 하나로 무역이득공유제(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분야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 필요함.

■ 2016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통계청, 2017.11.21.)

<요약>

- 1) '16년 일자리는 2,323만개로 전년 2,301만개보다 22만개(0.9%) 증가.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68.4%,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6.1%. 신규일자리는 361만개(15.5%), 소멸일자리는 339만개

2) 영리기업의 일자리는 82.6%이고, 그 중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80.8%(1,550만개).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32만개 증가, 대기업·비영리기업 일자리는 9만개, 2만개 감소

<종사자규모별 일자리 규모 및 증감>

(단위 : 만개, %)

종사자규모	일자리형태				소별일자리	일자리 증감 (신규-소별)
	계	지속일자리	대체일자리	신규일자리		
2016년 (구성비)	2,323 (100.0)	1,588 (100.0)	374 (100.0)	361 (100.0)	339 (100.0)	22 (100.0)
50인 미만	1,216 (52.4)	804 (50.7)	154 (41.1)	258 (71.6)	230 (67.8)	29
1~4인	577	421	27	128	102	26
5~9인	217	131	38	48	45	3
10~29인	195	116	40	40	40	0
30~49인	227	136	49	43	42	1
50~300인 미만	457 (19.7)	286 (18.0)	102 (27.1)	70 (19.3)	68 (19.9)	2
50~99인	156	94	34	27	25	2
100~199인	221	141	48	32	32	0
200~299인	81	51	19	11	11	0
300인 이상	649 (27.9)	497 (31.3)	119 (31.8)	33 (9.0)	42 (12.3)	-9
300~999인	99	65	24	10	10	-0
1,000인 이상	550	432	95	23	31	-9

3) '16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평균소득은 281만원, 중위소득은 209만원.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474만원, 중소기업은 224만원, 비영리기업은 308만원.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평균 596만원으로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평균 137만원으로 가장 낮음

4) 60세 이상이 점유한 일자리는 전년보다 28만개(10.7%) 증가하였고, 50대는 16만개(3.2%) 증가함. 반면 30대는 전년보다 15만개(△2.8%), 40대는 6만개(△0.9%), 20대 이하는 2만개(△0.5%), 감소함.

<연령대별 일자리 규모 및 증감>

(단위 : 만개,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지속 일자리	신규채용 일자리	계	지속 일자리	신규채용 일자리	계	지속 일자리	신규채용 일자리
전체 (구성비)	2,301 (100.0)	1,563 (100.0)	738 (100.0)	2,323 (100.0)	1,588 (100.0)	735 (100.0)	22 (0.9)	24 (1.6)	-3 (-0.4)
19세 이하	26 (1.1)	3 (0.2)	23 (3.1)	25 (1.1)	3 (0.2)	22 (3.0)	-1 (-2.4)	0 (14.7)	-1 (-4.4)
20대	332 (14.4)	161 (10.3)	171 (23.2)	330 (14.2)	161 (10.1)	170 (23.1)	-1 (-0.4)	0 (0.0)	-1 (-0.7)
30대	545 (23.7)	390 (25.0)	155 (21.0)	530 (22.8)	381 (24.0)	148 (20.2)	-15 (-2.8)	-9 (-2.3)	-6 (-4.0)
40대	623 (27.1)	458 (29.3)	165 (22.4)	618 (26.6)	458 (28.9)	159 (21.7)	-6 (-0.9)	0 (0.1)	-6 (-3.5)
50대	515 (22.4)	374 (23.9)	142 (19.2)	532 (22.9)	388 (24.4)	143 (19.5)	16 (3.2)	15 (3.9)	2 (1.3)
60세 이상	260 (11.3)	178 (11.4)	82 (11.2)	288 (12.4)	196 (12.4)	92 (12.5)	28 (10.7)	18 (10.3)	10 (11.7)

<원문 읽기> <https://goo.gl/XLr8oW>

시사점

1) 대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일자리는 감소하였음. 여전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형태는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음.

2) 50대 이상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20~40대 일자리 감소하여 청년실업의 심각성 알 수 있음.

최근 당의 활로를 두고 당내 외에 여러 의견들과 혼선이 있습니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들 되돌아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당의 발전을 위한 방법과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을 사랑하고 원하는 마음은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실제 사실에 근거한 토론, 감정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상대를 차분하게 설득하는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선 현재 당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 우리 당이 나아갈 길, 문제 해결 방법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2년 전 12월1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을 때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허허벌판에 험혈단신으로 서있는 느낌이 들었던,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정치를 바꾸라는 소명의식 하나만으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는 낡은 진보, 수구보수를 청산하고 합리적 개혁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지만으로, 기득권 세력의 거대한 철옹성에 도전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당의 진정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이 이미 느끼고 있듯이 결과가 참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세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2020년 총선에서는 호남에서도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뿐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상이 당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간단한 진단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우리당은 3등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서 지방선거에서 우선 자유한국당을 지지율로 눌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소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한국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인 국정농단세력 자유한국당을 위축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더 커진다면 국정농단세력은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걸 막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지율 3등이 된 자유한국당, 실정을 거둬주는 민주당 사이에서 두터워진 중도가 전진하면 다음 총선은 우리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기 극복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커다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3당 합당과 같은 말은 제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 저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수구보수세력을 망가지게 만든 데 가장 큰 공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2011년 서울시장 재

보궐선거 때 새누리당이 이기지 못하게 해서 큰 물꼬를 돌려놓았습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를 이기기 위해서 피눈물나는 양보를 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과 통합해서 승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때문에 여소야대가 되고, 촛불혁명을 주도해서 탄핵을 이끌었고, 지금의 지리멸렬한 자유한국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뒷집지고 눈치만 보고 있었지, 실제로 싸운 것은 저였습니다. 그렇게 온갖 커다란 피해도 감수하면서 신념을 지키며 살아온 저에게 3당 합당이란 말은 제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현 상황을 타계할 방법입니다. 내년에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만으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인재영입을 위해 뛰고 있지만, 가뜩이나 양당이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미약한 3지대마저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반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서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입 대상자들이 내세우는 최소한의 조건이, 선거연대 내지 통합을 통해 한 사람으로 후보가 통일될 때만 결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선거를 4자구도가 아니라 3자구도로 만들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시기와 절차가 있습니다. 정책연대, 선거연대 논의를 거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일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통합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바른정당이 20명이었을 때는 통합에 오히려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우리와 생각의 차이가 많은 구성원들이 있었고, 20명이 한꺼번에 합류할 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당대표 당선된 직후에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모는 줄었지만 순도는 높아졌고,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잡는다는 면에서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제3지대를 모두 우리가 가져옴으로써 지지율과 인재영입 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가 연대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또 몇 사람이 자유한국당으로 투항하고 국정농단세력은 세를 키울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개혁의 길에 합류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의 이러한 판단과 생각, 당의 비전과 갈 길에 대해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의 활로를 여는 중지를 모아가고자 합니다. 대안에 대한 고견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모두가 화합하고 신중하게 우리의 앞길을 고민하여 다함께 기회를 만들고 활로를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끝>